

농업 · 농촌 종합대책 보고대회 중 말씀

탈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오해야...

탈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오해야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은 분열과 갈등입니다. 같은 국민이 한쪽에서 파탄에 이르러 비이성적 투쟁으로 치달으면 사회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민 종합대책은 단지 농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민 안심책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미래 우리사회의 국력을 길러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 경쟁력 없는 농업에 지원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기제에 의해 농업인구가 줄어든다는 점, 탈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만만으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다시 개발해서라도 약속한 결과는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서라도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서 작은 것부터 성공시켜 나가야 합니다. 농촌정책에 대해 냉소적인 비판이 많지만 책임 있게 말하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의지로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불만은 개혁의 씨앗이지만 불만만으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책에는 실행할 사람과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육성하는 계획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사람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돈이 다 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농업정책에는 복지, 교육, 관광레저 정책도 포함되는 만큼 농림부, 산하단체, 유관단체에 모두 이에 맞는 전문가들이 함께 배치되어야 합니다. 상호교류, 네트워크 조직을 적합하게 짜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십시오.

도하개발아젠다(DDA) 관련해서 관세화 유예냐 관세화냐' 라는 명분에 매달리다 보면 실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농민대표, 전문가와 긴밀히 논의하되 실질적인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 맡겨주십시오.